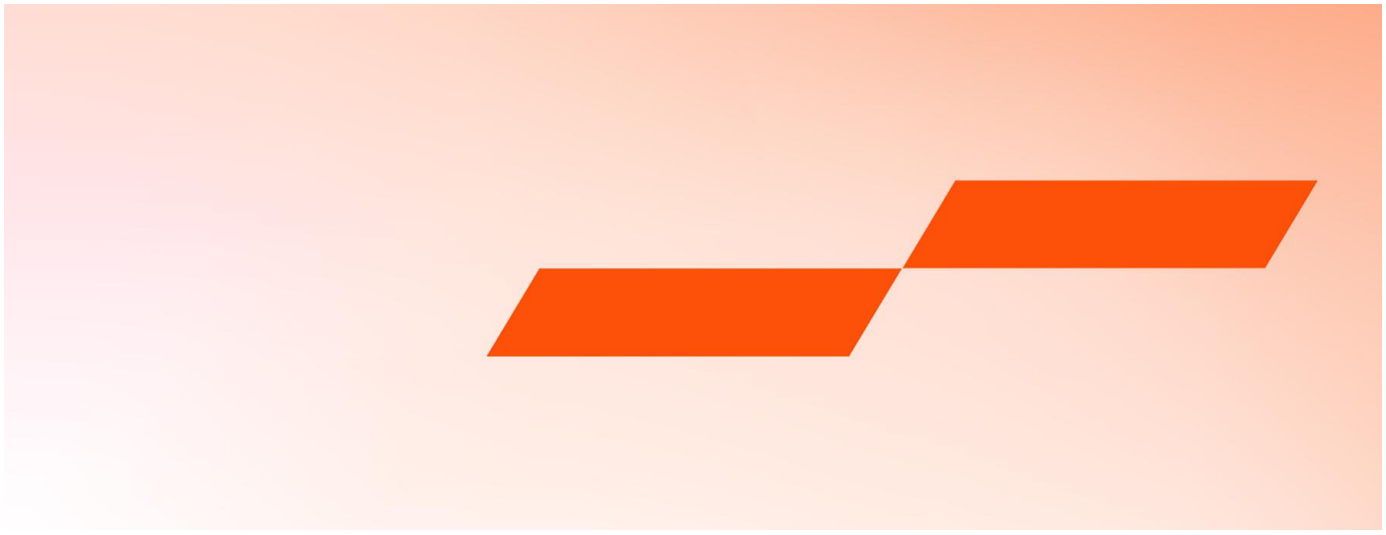
삼일회계법인

February 2026



Author Contacts
(삼일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김효진 연구원
hyojin.h.kim@pwc.com

트럼프 2기, 지난 1년의 변화와 향후 대응방안

산업 · 통상을 중심으로

Executive Summary

트럼프 2기 행정부 지난 1년 간의 통상 정책 및 산업 영향 점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특징

- 관세의 상시적 정책 수단화 및 불확실성 고착화
- 예측 가능한 규칙 기반 무역 질서 약화
- 외교 · 안보 · 산업 정책과 결합된 선택적 · 차별적 관세 운용

한국 주요 산업 영향

- **자동차 ·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담 직접 반영 및 구조 조정 압력 확대
- **반도체 · 제약 · 바이오**: 관세 불확실성 관리 국면, 실적과 영향 간 시차 존재
- **조선**: 관세 비영향 산업, 산업 · 안보 협력에 따른 기회 산업 부상

기업 대응 방향

1. 관세 지속을 전제로 한 경영 계획의 전환이 필요하다
2. 관세 대응형 '부분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3. 공급망 다변화 초점은 지역 분산이 아니라 '리스크 분리'에 맞춰져야 한다
4. 시나리오 기반 의사결정 체계가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
5. '관세 리스크 대응'과 '산업 협력 기회 활용'의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2026년 2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Business Contact

소주현 파트너
so.juhyun@pwc.com

삼일회계법인

> **변화는 예고 없이 오지만,**
> **기업가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이에 대응하며,**
> **기회로 활용한다.**
> Peter Drucker

본 보고서는 트럼프 2기 고관세 정책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 기업 대응, 향후 통상 · 산업 이슈 제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월 취임 직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전면 가동하며 보편 관세와 국가별 · 품목별 고관세 체제를 즉각 수립·시행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대미 통상 환경은 과거처럼 예측 가능한 구조에서 벗어나, 관세 부과 가능성과 정책 변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불확실한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본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전개된 고관세 정책이 한국의 핵심 산업(자동차, 반도체, 철강 · 알루미늄, 제약 · 바이오, 조선)에 어떤 구조적 충격을 가했는지를 집중 분석**한다. 단순한 수출 변화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 구조 재편, 공급망 재설계, 대미 생산 · 투자 전략 변화 등 실제 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기업들이 취해 온 현장 기반 대응 전략을 사례로 정리했다.

또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핵심 통상 · 산업 정책 이슈(관세 정책에 대한 미 대법원 판단 가능성, 품목별 고율 관세 확대 여부, 주요 교역국 간 관세 조정 흐름 등)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정책 ·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어본다. 이를 토대로, 관세 중심의 통상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이해를 위한 美 주요 통상 법령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란?

해외에서 비롯된 위협이 미국의 국가안보 · 외교 ·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세 · 수입 규제 · 금융 통제 등 경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법

무역확장법 232조란?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상무부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 통상 정책 전개 방향

트럼프 2기 경제 · 통상 정책 기조의 핵심은 이전보다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2기 취임 이후 '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 기조를 한층 강화하며 경제 · 통상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1기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무역적자 축소, 안보 · 경제 연계 전략이 2기에는 보다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정책 수단, 특히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로 구체화되고 있다.

2기 행정부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 조정 도구가 아니라 ▲미국 내 제조 유인, ▲전략 산업 보호, ▲외교 · 안보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과 IEEPA, 무역확장법 232조 등 기존 법률의 적극적 사용을 확대하며, 의회보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통상정책 집행 구조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에 대한 기술 · 공급망 견제도 지속되는 가운데, 동맹국과의 무역에서도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경제에 구조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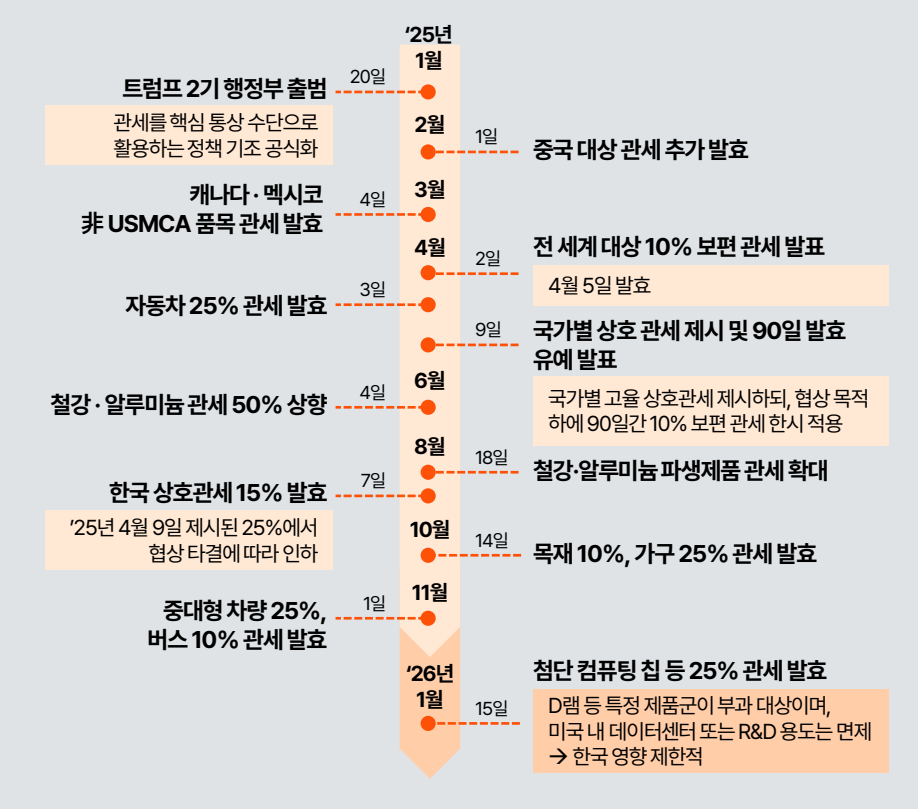
취임 즉시 전면·상호관세를 도입해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 기존 2.5% 수준에서 15~17%로 급등

2025년 2월 이후 미국은 캐나다 · 멕시코 · 중국을 시작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 · 인상을 연달아 시행했으며, 4월에는 ▲수입품 전반에 10% 보편 관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 관세, ▲철강 · 알루미늄 · 자동차 등 232조 관세 강화, ▲중국산 고율 관세 유지 · 확대 등을 포함한 전면적 관세 체계를 도입했다.

이 결과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은 2기 이전 2.5% 수준에서 2025년 11월 기준 15~17%로 급등한 것으로 추정[1]된다. 이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행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보호무역 성격이 역사적으로도 예외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1) Visual Capitalist 및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 (Budget Lab) 추정 ('25년 11월)

[참고]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 관세 부과 주요 타임라인



참고: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을 기준으로, 각 세율의 최종 확정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
자료: 백악관, Atlantic Council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품목관세 현황

구분	근거	대상	관세율	발효일
상호 관세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한국	15%	'25.08.07.
		중국	10%	'25.05.14
		일본	15%	'25.08.07.
		EU	15%	'25.08.07.
품목 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상품	50%	'25.06.04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25.04.03 (자동차) '25.05.03 (부품)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50%	'25.08.01
		목재 및 파생제품	25% (가구) 10% (목재)	'25.10.14
		트럭 및 버스	25% (트럭), 10% (버스)	'25.11.01
		첨단 컴퓨팅 칩 및 파생제품	25%	'26.01.15
		반도체 및 제조장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조사 중	
		의약품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조사 중	

참고: 주요 국가 및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현시점에서 적용 중인 관세율 기준으로 정리
자료: 관세청, Atlantic Council

2.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 한국 수출 영향 및 산업별 점검

한국에 대한 관세는 협상을 거쳐 15%로 확정됐으며, 현재는 품목별 예외를 제외하고 15% 상호관세가 기본 구조로 정착된 상태

2025년 4월, 미국은 IEEPA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했다. 이로써 **한미 FTA 기반의 무관세 · 저관세 체계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완화를 목표로 ▲대미 직접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전략 산업 공동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양자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 결과는 양국 공동 발표문(Joint Fact Sheet)에 담겨 관세 조정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2025년 7월 30일 양국은 전면적 합의에 도달했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8월 1일 행정명령으로 공식화되었으며, 8월 7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되어 한국의 대미 수출에는 기본적으로 15% 관세 체계가 자리 잡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재인상 언급하며 정책 불확실성 확대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합의에 기반한 관세 완화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이는 관세 수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재차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 수출·투자 전략 수립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 자동차 부품이 25%에서 15%로 완화되었으나, 기존 한미 FTA의 무관세에 비하면 부담이 새로 발생했다.

반면 **철강 · 알루미늄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25년 6월 232조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고, 이는 한국산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어 8월에는 관세 기준이 '완제품'에서 '철강이 함유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계·전자 등 후방 산업 전반에까지 관세 부담이 확대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말 디 미니미스 제도[1] 폐지로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도 15% 상호관세 또는 정액 관세가 부과되면서, 소비재 · 이커머스 등 B2C 수출뿐 아니라 중소 · 중견기업 전반의 비용 구조 및 유통 전략 재검토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2)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는 1938년 미국 관세법(Section 321)에 도입된 제도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의 행정 비효율성을 고려해 마련된 관세 면제 제도임. 이후 기준 금액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2016년부터는 미화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무관세 적용, 2025년 8월 제도 폐지로 모든 소액 수입품에 관세 부과 전환

[참고] 미국의 對한국 관세율 현황 및 Joint Fact Sheet 주요 내용 ('26.1.20 기준)

상호 관세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15%로 인하 (기존 25%)

주요 품목별 관세

자동차 · 부품	원목 · 제재목과 목재 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철강 ·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15%	15%	상호 관세 철폐, 완전 면제	50% (함량과세)	50% (함량과세)

* 미국의 국가안보 판단에 따라, 무역협상과 무관하게 한국 포함 모든 수출국에 국가안보 기준의 관세 또는 쿼터 조치가 적용

미국 관세 정책 조정과 연계된 한 · 미 경제 · 안보 협력 Joint Fact Sheet 주요 내용

경제 분야

한국의 對미국 투자 펀드액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투자 상한 한도 200억 달러 설정)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한국 기업 주도, 보증 포함)

수익배분 방식
- 원리금 상환 전 한미 5:5 배분
- 20년 내 원리금 전액 미상환 시 수익배분 비율 조정 가능
- 원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 등

안보 분야

한미 동맹 현대화
- 주한 미국 지속 주둔,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재확인
- 한국 국방비 GDP의 3.5%까지 조속 인상
- '30년까지 미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지출
- 주한 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 포괄적 지원 등

한반도 및 지역 문제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대만 해협 평화 안정 유지 중요성 강조, 양안 문제 평화적 해결 장려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 미국 상선 · 군함의 한국 내 건조 가능성
- 한국 원자력추진장수함 건조 승인, 연료 조달 방안 등 긴밀한 협력
- 한국의 우라늄 농축, 평화적 목적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지

자료: 언론 종합, 대통령실

미국발 고관세 충격 속 2025년 한국 수출은 위축인 아닌 재편의 과정

주요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미국발 고관세라는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고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수출 전반에 대한 둔화 우려가 제기됐으나, **2025년 한국의 총수출은 7,09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모든 시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8% 감소하며 총수출 증가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둔화됐고, 관세 부담을 고려해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대응이 병행됐다. 그 결과, **대미 수출 감소는 미국 시장의 수요 위축보다는 관세 부담에 대응한 생산 · 공급 방식의 조정, 즉 수출 구조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관세 부담으로 대미 수출 구조 변화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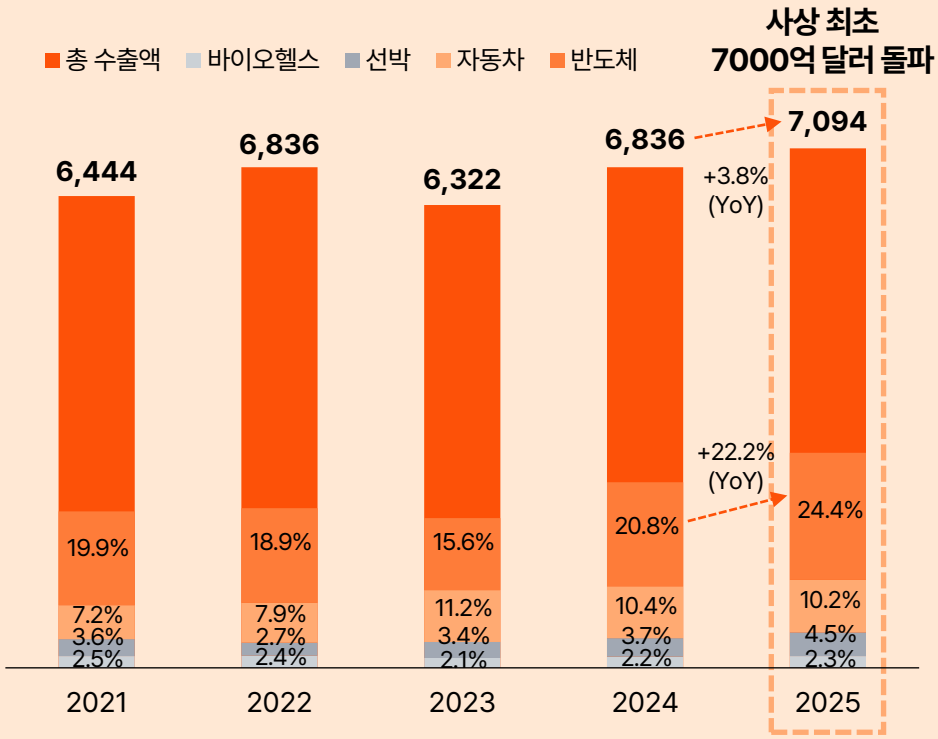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2025년에도 수출 규모 확대를 이어갔으나, 성장의 지역 구성과 사업 방식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업의 경우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산업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해양·안보·제조업 재건 기조와 맞물리며 중장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2025년 수출 실적은 관세보다는 2022~2023년에 수주한 고부가가치 LNG선의 인도 물량이 본격 반영된 영향이 컸다. 반면 철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에 더해 관세 부담이 겹치며 수출 부진이 지속됐다. 산업별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노출 정도와 실적에 반영된 시점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 장부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통상 환경 변화 가운데 고관세 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반도체, 철강 · 알루미늄, 조선의 변화를 산업별로 살펴본다. 특히 수출 여건 변화 뿐만 아니라 비용 구조, 공급망 조정, 대미 투자와 생산 전략 등 기업의 실제 사업 운영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참고]

한국 총 수출액 및 주요 품목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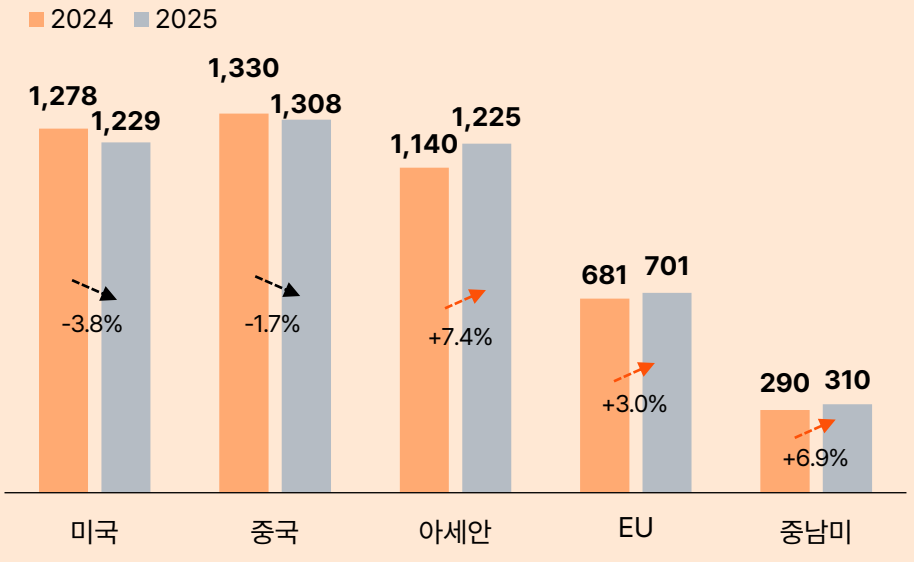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한국 주요 국가·경제권별 수출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산업통상부 ('26.1.1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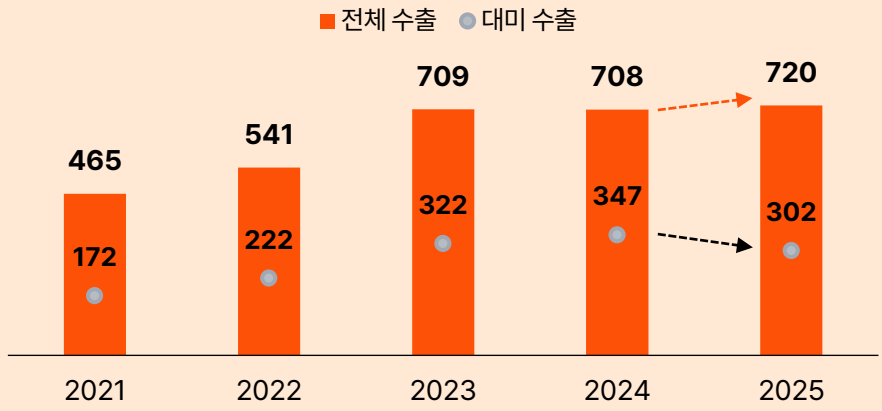
① 자동차

대미 수출은 감소했으나, 미국 외 시장 확대로 자동차 총 수출은 사상 최대 기록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고관세 기조가 본격 반영된 2025년,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자 전체 수출 비중이 가장 큰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 분야였다. 실제로 2025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하며, 고관세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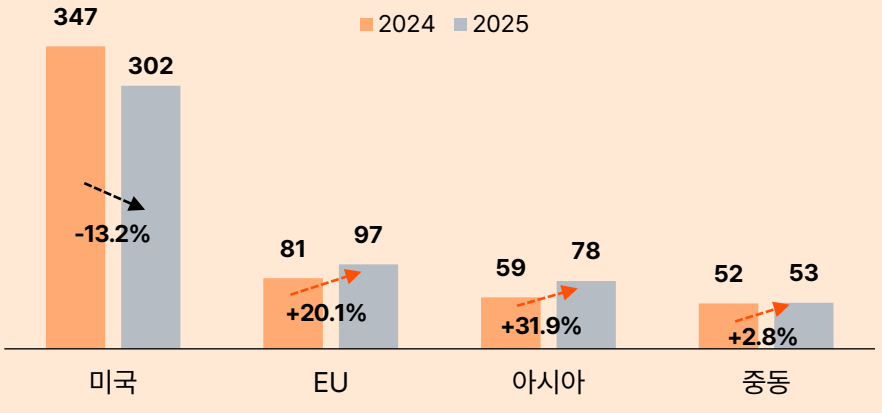
다만 이러한 대미 수출 감소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미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자동차 총수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5년 한국의 자동차 총 수출액은 7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보면 EU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20.1% 증가했고, 기타 유럽 및 아시아 지역 역시 3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미국향 감소분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한국 자동차 수출액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한국 자동차 지역별 수출액 증감율
(단위: 억달러)



자료: 산업통상부('26.1.15 발표)

미국 내 생산 확대, 차종 재편 등으로 대미 수출 감소 일부 흡수

이러한 결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구조가 특정 국가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보다 분산된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완성차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수출 전략과 생산 구조를 조정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고관세 환경에서 대미 수출 물량을 유지하기보다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해 정책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를 본격 가동하며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했으며, 앨라배마(현대차)와 조지아(기아) 기존 공장 역시 높은 가동률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오닉 5 등 주요 차종의 현지 생산 비중이 확대됐고, 기아 역시 미국 판매 물량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체계를 재편했다. 그 결과 **대미 수출 물량은 감소했지만, 미국 시장 내 판매 규모와 점유율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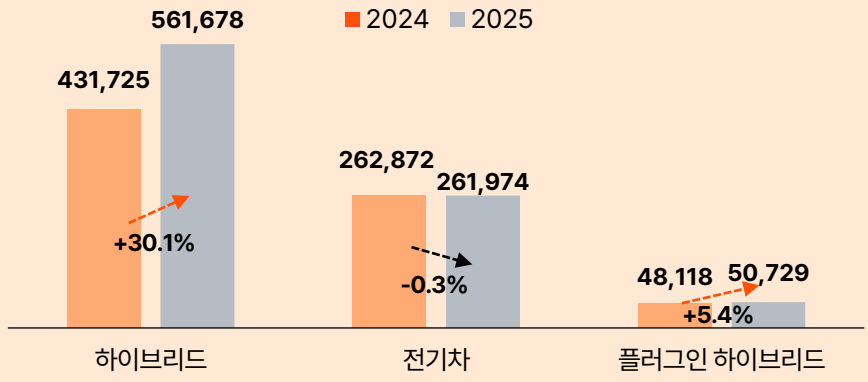
차종 전략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차 · 기아는 전기차 단독 확대보다는 **하이브리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통해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 변화를 흡수**했다. 2025년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미국 내 하이브리드 판매 역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 국면에서 차종 믹스 조정이 수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글로벌 완성차, 생산거점 재편 등으로 관세 대응

이와 유사한 대응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도 확인된다. 도요타는 미국 내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에 대응해 켄터키 등 현지 공장의 하이브리드 생산 비중을 높이고, 일부 핵심 차종의 현지 생산 전환을 검토하며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수출 물량 조정보다는 생산 거점과 차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

(단위: 대)



자료: 산업통상부('26.1.15 발표)

②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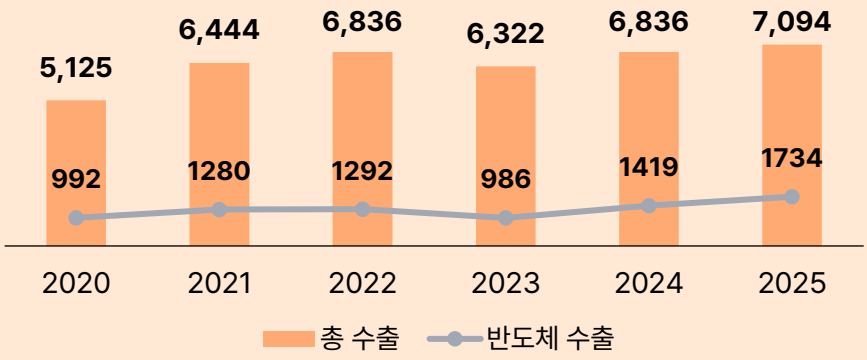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안보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6년 1월 15일 고성능 연산용 첨단 컴퓨팅 칩을 대상으로 한 25% 관세 부과로 구체화**되었다. 다만 해당 조치는 전체 반도체가 아닌 AI · 고성능 연산용 칩에 한정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 · R&D · 공공부문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 예외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현 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가 단독 제품보다는 AI 서버 · 데이터센터 시스템에 통합된 형태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아 예외 대상에 상당 부분 포함되기 때문이다.

2025 반도체 수출: 관세 리스크 속에서도 압도적 호조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반도체 수출은 1,734억 달러(YoY +22%)를 기록하며 전체 한국 수출 호조를 견인했다. 미국발 관세 이슈가 부각된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반도체 산업이 2025년 명확한 호황 국면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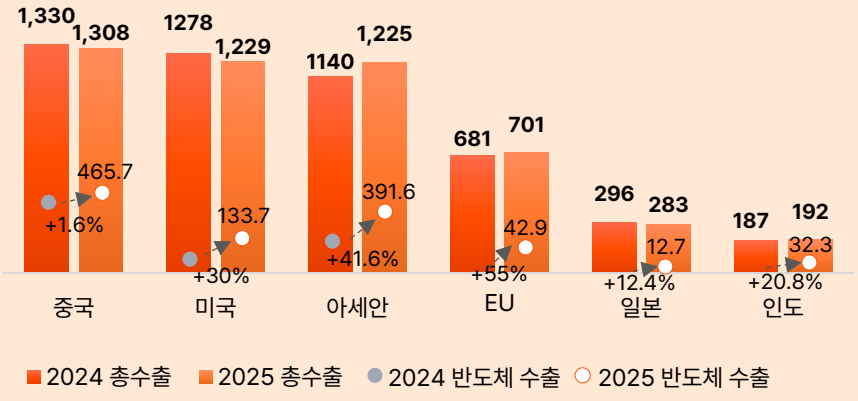
한국 총수출액 및 반도체 수출액 추이

(단위: 억달러)



주요 지역별 한국 총 수출액 및 반도체 수출액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산업통상부 ('25.1.1 및 '26.1.1 발표)

AI 수요 확대 등이 한국 반도체 수출 호조 견인

2025년 실적 개선의 가장 직접적 요인은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AI 학습 · 추론 서버 확충이 본격화되면서 HBM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다. 관세 부담이 일부 비용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AI 수요가 이를 충분히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메모리 가격이 2023~2024년 조정을 거친 뒤 2025년에 반등해, 출하량 증가 + 단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며 수출 확대를 뒷받침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역 구조 변화: '수출 감소'가 아닌 '수출 구조의 재편'

반도체 산업에서 더 주목할 변화는 수출 구조의 점진적 전환이다. 관세 부담 증가 속에서 미국은 현지 생산 · 현지 조달을 선호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 비중이 일부 조정되고 있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반도체 수요 자체가 위축된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 내 공급 방식이 재편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내 조달 · 생산 구조 재편: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화 가속

국내 주요 메모리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국 내 후공정 · 패키징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는 글로벌 고객사의 장기 조달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 내 공급망 현지화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관세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미국 내 데이터센터, ▲미국 기업의 R&D 용도에서는 관세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현지 공급망 구축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보다는, 미국 현지 산업 내에서의 공급 형태 전환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망 재편은 한국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중심 정책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전반에 대해 "수출 중심 → 현지 생산 · 현지 조달 확대"라는 전략적 전환을 촉발하고 있다. 즉, 관세 정책은 수출 규모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배치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흡수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시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5년 반도체 업황은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호황을 기록했다. 이는 관세의 영향이 미미했다는 뜻이 아니라, **AI 기반 수요 폭증이라는 구조적 성장 요인이 관세 부담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주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결국 반도체 산업은 호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역 구조 · 공급 방식은 이미 변화 국면에 진입했으며 향후 실적 방향성은 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의 구조적 대응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철강 · 알루미늄

트럼프 2기 행정부 철강 · 알루미늄 관세율 50%로 상향, 국가별 · 품목별 예외 종료, 파생제품까지 적용 확대 → 한국 관련 수출 직접적 타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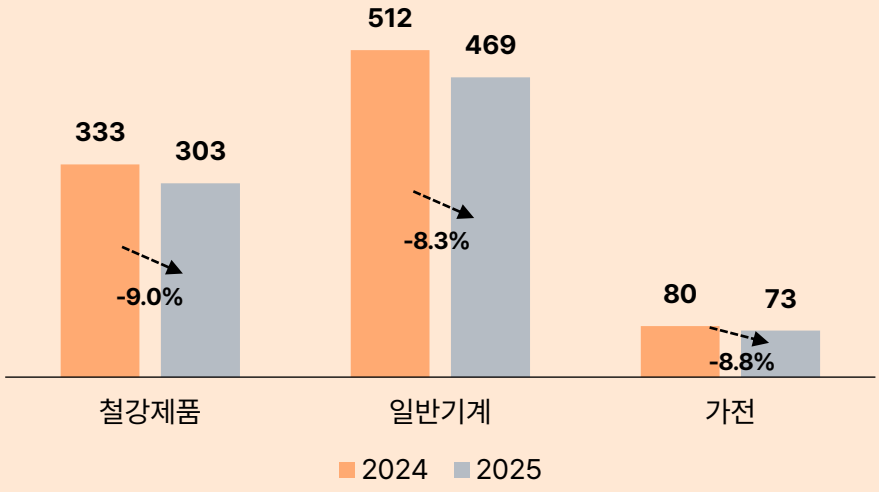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고율 관세를 재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025년 6월부터 양 품목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되었고, 국가별 면제와 상당수 품목별 예외 조치도 종료**되었다. 특히, **같은 해 8월에는 관세 적용 범위가 원자재를 넘어 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한 파생제품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가전·자동차 부품·기계·전력 설비 등 광범위한 제조업이 영향권에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고관세 정책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받은 대표 산업이 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철강 공급국으로, 2025년 이전까지는 관세 대신 수출 쿼터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232조 조치 강화 이후 이러한 완충 장치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관세율 인상 후 대미 철강 수출은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특히 가격 전가가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조정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번 조치의 핵심적 특징은 **파생제품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으로 분류하고, 제품 내 금속 함량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 LG전자 등 국내 가전 기업의 대미 수출 비용이 크게 상승했고, 일부 품목에서는 실제 수출 물량 감소가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최종 수요 위축으로 연결되었다기보다는, 가격 조정 · 조달 다변화 · 현지 생산 확대 등을 병행하며 비용 충격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철강 · 알루미늄 관세 대상 연관 주요 품목 수출액 추이 (2024–2025)

(단위: 억달러)



자료: 산업통상부 ('26.1.1 발표)

대기업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와 출고가 · 판촉 조정 등을 통한 관세 부담 비용 흡수 병행

가전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거나 미국산 철강 · 알루미늄 조달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나, 이는 인건비 · 소재비 상승을 통한 원가 압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기업은 **출고가 조정이나 판촉 축소 등으로 관세 부담의 일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고 있지만, 조정은 단계적 ·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반면,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생산 거점 이동이나 미국 현지 조달 확대 등 전략적 대응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단기간에 공급망 전환이 어려워 관세 부담이 납품단가 인하 압력 또는 수익성 저하 형태로 보다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철강 · 알루미늄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조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수입 물량 감소+생산거점 미국 내 유도라는 복합적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 현지화 · 가격 전략 조정을 병행하며 정책 리스크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종합하면 철강 · 알루미늄 부문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실적 · 수출 · 원가 구조 전반에 가장 가시적 영향을 미친 산업으로 평가된다. 관세 부담은 원자재에 그치지 않고 가전 · 자동차 등 수요 산업으로 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생산 · 조달 전략뿐 아니라 가격 정책까지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향후 정책 환경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비용 압박은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철강 · 알루미늄 산업뿐 아니라 이를 투입재로 사용하는 제조업 전반의 수익성에도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④ 제약 · 바이오

미국, 제약·바이오 대상 고관세 예고해 부과 가능성 임박한 상황

2025년 상반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제의약품과 API 등 제약 · 바이오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같은 해 9월 미국 상무부는 PPE(개인보호장비),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해 관련 품목에 대한 검토 절차를 착수했다. 이후 브랜드 · 특허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아직 관세가 실제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약 · 바이오 관세 관련 주요 경과

시기	진행 경과
'25년 상반기	• 트럼프 대통령 언론 등에서 제약 · 바이오 고율 관세 가능성 반복 언급
'25년 9월	• 美 상무부 PPE,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 장비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공식화 • 트럼프 대통령 Truth Social 통해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은 제약사는 브랜드 · 특허 의약품에 10월 1일부터 100% 관세 부과 예고
'25년 10월	• 글로벌 제약사들과 약가 인하 · 미국내 투자 등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관세 부과 잠정 보류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의 약가 규제가 미국에 불리한지에 대한 조사 시행

*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보복 관세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권한을 부여한 미국의 대표적 일방적 무역 제도

자료: 백악관, 언론 종합

미국의 제약 관세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최혜국 대우 약속 받았으나 바이오시밀러는 여전히 불확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2025년 11월 한 · 미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미국이 제약 · 바이오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산 의약품에는 최대 1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 상한과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 예외 품목으로 명시**된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협정문에 별도 규정이 없어 품목별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로써 100%까지 거론되던 초고율 관세 위험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지만, 바이오시밀러 등 비명시 품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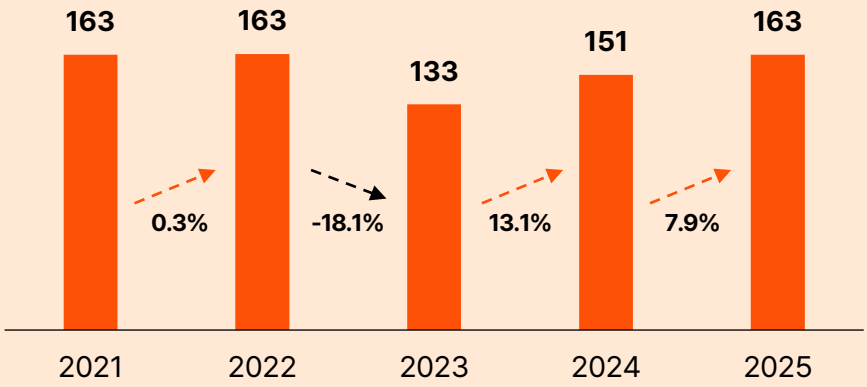
미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2025년 한국 제약·바이오 수출 증가

한편, **2025년 한국의 바이오헬스 수출은 1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하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제약·바이오 품목 관세가 실제 발효되지 않았으나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수출은 바이오시밀러와 위탁생산(CMO)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가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이 반영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제네릭 의약품은 정상회담 합의에서 무관세 예외 품목으로 확정되었고, 바이오시밀러 역시 협정문에 별도 규정은 없었으나 2025년 중 실제 관세가 발효된 사례가 없어 수출 흐름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바이오 헬스 수출액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산업통상부 ('26.1.1 발표)

제약·바이오 관세 가능성에 국내 제약사들 미국 생산·재고 확충 등으로 선제 대응 중

이와 같은 수출 증가 흐름과 별개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국의 통상 정책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5년 한 해 동안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했다. 셀트리온은 관세 부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주 일라이릴리 생산 시설을 인수하며 현지 제조 기반을 확보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원료의약품(DS) 생산시설을 2억 8,000만 달러에 인수해 북미 생산 역량을 확충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푸에르토리코 생산 시설 운영을 통해 향후 미국 내 직접 생산 전환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며 잠재적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다수 국내 제약사는 미국향 의약품 재고 확충, 공급선 다변화, 현지 CMO 및 병행생산 체계 강화 등 조치를 병행해 관세 부과 시 공급 차질을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관세 불확실성 높아지자, 글로벌 제약사들 선행 공급 · 약가인하 · 미국 생산 확대

글로벌 제약사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해 2025년 한 해 동안 **'선행 공급(front-loading)'과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했다.

실제로 2025년 **전 세계 제약 생산량은 미국의 대규모 관세 위협을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선제적 생산 · 출하 증가로 9.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의약품 수출 비중이 높은 유럽 · 영국은 전년 대비 21.6%,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기지가 집중된 아일랜드는 41.3%까지 생산이 증가하는 등 관세 시행 이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1].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 특허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2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잇따라 언급하자, **글로벌 제약사들은 관세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시설 증설, 신규 제조 부지 확보, 핵심 공정의 현지화 등 제조 기반의 미국 이전 · 확대 전략이 가속화되었다.

이와 병행해, 2025년 하반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약가 인하(최혜국대우(MFN) 가격 적용[2])과 미국 내 제조 · 투자 확대를 결합한 협상 방식을 제시했다. 즉,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세를 회피하는 조건으로 MFN 가격 제공+미국 내 투자 확대라는 패키지를 제약사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 화이자 · 아스트라제네카 · 머크 등 **주요 글로벌 제약사는 미국 정부와 MFN 가격 제공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MFN 가격이 적용된 의약품을 환자와 정부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 없이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는 온라인 직접구매 플랫폼 TrumpRx 구상을 발표했다. TrumpRx는 MFN 기반 가격 구조를 통해 약가 투명성 제고와 저소득층 · 무보험자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일부 기업은 TrumpRx 참여와 미국 내 제조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향후 관세 유예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 아트라디우스(Atradius) 의약품 산업 동향 참고 ('26년 1월 16일 발표)

2)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MFN) 가격 적용이란, 특정 의약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을 다른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최저 약가)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적 방식을 의미. 즉, 제약사가 동일 의약품을 유럽 · 영국 · 캐나다 등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면, 미국 정부는 그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MFN 가격)을 기준으로 미국 내 약가를 재설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미국의 제약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글로벌 제약사 약가 인하 협상 주요 내용

제약사	약가 인하 주요 내용
암젠	에이모빅(편두통) 60%, 암제비타(휴미라 바이오시밀러) 80% 인하 등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	호흡기 질환 흡입제 등 최대 66% 인하
화이자	MFN 가격 적용 의약품 메디케이드 제공
길리어드	HIV, COVID 치료제, C형간염 등 인하
사노피	당뇨, 신경, 심혈관, 암 치료제 평균 61% 인하
일라이 릴리	비만, 당뇨약 등 일부 제약품 인하
노바티스	다발성경화증약 메이젠트 등 89% 인하
베링거 인겔하임	당뇨약 젠타듀에코 90% 인하
제넨텍	독감약 조플루자 70% 인하

자료: 각 사, 언론 종합 ('25년 12월 말 기준)

미 고관세 속 중국은 기술·품질 고도화와 글로벌 공급망 역할 확대에서 성장 기회 포착

이와 같이 미국이 고율 관세를 압박해 제약 · 바이오 산업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운데, **미국 외 지역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포착**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압박 속에서도 기술·품질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내 역할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2025년 중국의 제약 · 헬스케어 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3.14% 증가(약 1,113억 달러)하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고, **그중 고부가 완제의약품 수출은 27.29% 급증해 기술 · 품질 중심의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제약사의 혁신 신약(out-licensing) 계약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넘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임상·상업화 협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이 API · 핵심출발물질(KSM) · 바이오 의약품 · 혁신신약 개발 등 전 가치사슬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내 생산 이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중국 제약 산업에는 수출 확대 · 기술 협력 강화 · 혁신 파이프라인 수요 증가**라는 반사이익을 제공하며 **글로벌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⑤ 조선

트럼프 2기 통상 환경 속 조선업은 '규제 산업'이 아닌 '전략적 협력 산업'으로의 전환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조선업은 한국에 가장 뚜렷한 기회가 열린 산업으로 평가**된다. 미국 조선업은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 군함 MRO(유지·보수·운영) 병목, 노후 조선소의 구조적 비효율 등으로 생산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은 0.04% 수준까지 추락하며, 자국 내 조선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여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선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미국 조선 역량을 외부에서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한국 조선사를 핵심 파트너로 활용하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상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 조선업계는 LNG선 · 친환경선박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 모듈러 기반의 생산 체계를 상업적으로 구현하고 있어, 단기간 내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글로벌 조선 역량 공급자라는 점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 투자 협력이 반대급부로 작용

이 같은 기조는 한 · 미 통상 협상 과정에도 직접 반영되었다. 미국은 2025년 상반기 한국산 전 품목에 대해 25%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제시했으나, 최종 합의에서는 15%로 완화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중 1,500억 달러가 한 · 미 조선 협력에 배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조선업은 통상 갈등 속에서도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정확히 교차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 · 미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 내 MASGA 프로젝트 주요 내용

명칭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투자 규모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
재원 확보 방안	정책금융기관 대출 보증 및 기업 투자
투자 내용	미국 LNG선 및 상선 물량 건조 협력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미 해군 MRO(유지, 보수, 운영) 참여

참고: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는 2025년 11월 14일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식 합의 문서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MASGA' 협력 패키지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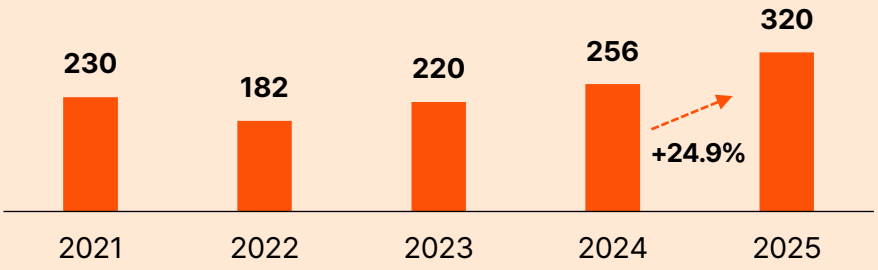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언론 종합

미 조선 재건과 맞물린 한국 조선, 실적 · 구조 동반 상승

이러한 정책적 배경은 한국 조선업의 실적 개선과 맞물리며 상승 기류를 강화했다. **2025년 한국의 선박 수출은 320억 달러(전년 대비 +24.9%)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과거 수주한 고선가·고부가 LNG선과 친환경 선박의 본격 출하가 이어지며 구조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글로벌 조선 공급 능력이 제약된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견제, ▲에너지 · 운송 산업의 전환 수요 확대, ▲선주사의 발주 집중 현상이 동시에 작용하며 한국 조선소의 수주 · 출하 환경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선박 수출액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산업통상부 ('26.1.1 발표)

기업별 대응 역시 실제 실행 단계로 이어졌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내 생산·정비 기반을 직접 확보했으며, HD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공동 생산 체계 구축 등 MASGA 기반 협력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확장 하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MASGA 특별법 논의, 조선기술 TF 운영, 미국 현지 인력 양성 및 숙련 기능 인력 파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선체 블록은 한국에서 제작하고 최종 조립·의장·시험 공정은 미국에서 수행하는 한·미 분업형 생산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미 조선 분업 구조, 기업 투자로 구체화

국내 조선 3사 미국 투자 및 협력 주요 내용

한화오션	• 미국 한화필리조선소 인수 후, 신규 도크 2개, 안벽 3기, 블록 생산기지 구축 등에 50억 달러 투자
HD현대	•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상선 및 군함 설계 · 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 각서' 체결 → 2027년 8월부터 첫 건조 시작 계획 • 서버러스 캐피털 · 한국산업은행과 한 · 미 조선 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 체결 • 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ECO)와 인프라 공동 투자 협력
삼성 중공업	• 미국 군함 MRO 전문기업 비건 마린 그룹과 파트너십 체결 •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계열 조선사 나스코 및 한국 엔지니어링업체 디섹과 3자 간 사업협력 합의서(MOU) 체결 → 선박 설계, 장비 · 부품 공급, 인력 개발 분야로의 사업 확대 추진 및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공동 입찰 검토 진행 계획

자료: 각 사, 언론 종합

개선 흐름 속 리스크 상존, 지속 모니터링 필요한 한국 조선업

물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미국 정책 변동성, Jones Act[1] 개정 지연, 대규모 선제 투자에 따른 자본 부담, 중국 조선사의 반사적 견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2025년 조선업은 트럼프 2기 통상 환경에서 규제가 아닌 '정책 기회'가 실적으로 연결된 거의 유일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관세 부담이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미국 조선 기반 재건이라는 장기 대규모 협력 프레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종합하면, 미국의 구조적 조선 역량 공백과 한국의 고부가 선박 경쟁력이 통상 협상과 산업 협력의 흐름 속에서 직접 결합되면서, 관세 압력 국면이 시장 축소가 아닌 시장 확대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조선 기반 회복을 위해 외부 역량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조선사가 미국 내 생산·정비·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었다. 동시에 한국 조선업은 과거 수주 물량의 본격 출하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며, 협상–생산–수출의 세 축이 모두 강화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한 한 해였다.

이러한 변화는 관세 중심의 통상 환경이 산업별로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조선업의 경우에는 정책 · 역량 · 시장 요인이 맞물릴 때 산업 기회가 어떻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1) 1920년 제정된 존스법(The Jones Act)은 미국 내 항만 간 화물 운송에 대해 미국 건조 · 미국 선적 · 미국 시민 소유 · 미국인 승무원 탑승 요건을 부과하는 법령. 최근 미 의회에서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에 대한 제한적 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가 초당적으로 발의, 의회 심사 단계 진행 중

3. 트럼프 2기 행정부: 향후 주목할 통상 · 산업 리스크와 쟁점

미국 관세 압박의 상시화로 한국 산업 정책환경 구조 변화

2025년 한 해 동안의 산업별 영향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정 수준을 넘어 한국 주요 산업 전반의 공급망·생산·수출 구조를 직접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정책 변수로 자리잡았다. 관세는 더 이상 비용 항목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시장 전략·생산 입지·조달 구조·고객 포트폴리오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2026년 통상·산업 환경을 결정지을 주요 리스크와 정책 이벤트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상호관세 재인상 위협의 상시화
② 외교 · 안보 이슈와 결합된 관세 압박 확대
③ 반도체 · 제약 ·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
④ IEEPA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
⑤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아래에서 각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① 상호관세 재인상 위협의 상시화

정치 변수에 따라 상호관세 재인상 위협 상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상호관세가 '협상 종료'가 아니라 **'협상 유지·압박 수단'으로 기능하는 양상**이 명확해지고 있다. 2026년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의 관세 합의 이행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관세율이 한 차례 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이나 상대국의 정책 대응에 따라 언제든 재검토·재인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세 변동성의 상시화'는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대다수 교역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협상 기제이며, 2026년에도 국가별 관세율은 정책 메시지 · 대내외 정치 이벤트에 따라 주기적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외교 · 안보 이슈와 결부된 관세 압박 확대

미국이 관세를 외교 · 안보 압박 수단으로 확대

2026년 들어 관세는 전통적 통상 이슈를 넘어 **미국 외교·안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직접적 압박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참여 거부 시 프랑스산 와인에 200% 관세 부과 가능, ▲그린란드 안보 문제를 둘러싼 유럽 동맹국 대상 관세 시사,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경고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관세를 외교적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흐름은 관세 적용의 기준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안보·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적용 대상·시점·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동반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안보 협력 · 대외정책 공조가 통상 이슈와 연결될 여지가 있어, 2026년에는 통상 리스크에 더해 외교·안보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한 평가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사례(발언 기준)

발언 일자	대상 국가 · 지역	쟁점 사항	언급된 관세 조치	성격 · 의미
1월 13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 강경진압 및 이란 핵 · 중동 안보 긴장 재부각	25% 관세 부과	제3국 거래까지 포함한 세컨더리(2차 제재) 성격의 관세 압박
1월 17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8개국)	8개국 그린란드에서 열리는 NATO 연합 군사훈련 참여 및 파병 결정	모든 수입품 10% 관세 부과	안보 사안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
1월 19일	프랑스	미국 추진 중인 평화위원회 (Board of Peace) 참여 거부	프랑스산 와인 200% 관세 부과	외교 · 정치적 협조 여부를 관세와 직접 연계
1월 24일	캐나다	대중(對中) 외교 노선 및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	모든 수입품 100% 관세	미국 대중 전략과 어긋나는 외교 · 경제 행보에 대한 압박
1월 27일	한국	한미 관세 합의 이행 관련 치 · 입법 절차 지연	합의 관세율 15% → 25% 인상	통상 합의를 조건부로 유지하며, 이행 상황에 따라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

참고: 상기 관세 부과 발언 이후 실제 부과 사례는 없음('26.1.30 기준)
자료: 언론 종합

③ 반도체 · 제약 · 바이오 등 전략 산업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

미국 전략 산업 관세 범위 확대로 불확실성 증대 전망

반도체·제약·바이오와 같은 전략 산업은 2026년 통상 정책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힌다.

- 반도체는 이미 2026년 1월 중순부터 첨단 컴퓨팅 칩 일부에 25% 관세가 발효되었고, 이는 산업 · 안보 전략과 결합된 미국의 선별적 관세 정책을 보여준다. 현재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협상 상황 · 안보 이슈 ·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제약 · 바이오 역시 2025년 동안 100% 관세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정치적 활용도가 높았으며, 이후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정책 완화가 아닌 일시적 유예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2026년에는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한 품목 관세가 산업별 · 용도별 · 공정별로 새로운 형태의 규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며**, 기업들은 관세 발효 이전 단계에서 이미 생산 · 투자 · 조달 구조를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④ 미 연방대법원 판결: IEEPA 관세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핵심 변수

미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 시에도 미국의 관세 기조 자체는 다른 법적 수단 통해 유지될 가능성 높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은 2026년 통상 정책을 좌우할 핵심 사법 변수이다. 2025년 11월 구두변론 이후 현재까지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이 사안이 대규모 환급·정책 혼선·헌법적 충돌 등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IEEPA는 전통적으로 제재·자산 동결 등에 활용돼 왔으나,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위헌 판결 시 미국 정부가 최대 1,500억 달러(약 200조원) 규모 환급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대법원의 신중한 접근을 이끌고 있다.

다만, **IEEPA 기반 관세가 위헌으로 판단되더라도, 미국 행정부는 232조 · 301조 등 기존 무역 법령을 활용하여 유사한 관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이 관세 수준 자체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정책 집행 방식 · 절차 · 정치적 정당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관련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진행 결과 및 향후 방향

현재까지 진행 경과	향후 진행 방향
• 트럼프 행정부 → IEEFA[1] 근거로 전세계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25년 4월) • 12개 주정부 등 → CIT[2]에 **상호관세 무효 소송 제기** ('25년 4월) • CIT → **상호관세 부과 위헌 판결** ('25년 5월) • 트럼프 행정부 → CIT 판결 불복 및 **CAFC[3]에 항소** ('25년 5월) • CAFC → **상호관세 부과 위헌 판결** ('25년 8월) • 트럼프 행정부 → CAFC 판결 불복 및 **연방대법원 상고** ('25년 9월) • 연방대법원 → 패스트트랙 채택 및 트럼프 행정부 구두 변론 진행 ('25년 11월) • 연방대법원 → 상호관세 경제 파급 효과 등 심리 진행 ('25년 11월~현재)	•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 → 미정 ('26년 2월 20일 또는 3월 중 예상)

1)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대외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2) 미국의 관세·무역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연방 법원으로, 행정부의 무역 조치가 법률에 부합하는지 판단
3) 미국의 국제무역·특허·연방청구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항소법원으로, CIT(국제무역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

자료: 언론 종합 ('26년 1월 30일 기준)

⑤ 미국 중간선거: 관세 정책의 정치적 부담 및 불확실성 확대

미국 중간선거가 관세·통상 정책의 정치적 부담 변수로 작용 전망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뿐 아니라, 관세 정책의 지속성·강도·정치적 활용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치 이벤트**다.

2025년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1] 등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것은 경제·물가 부담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2026년 중간선거가 전통적 '여당 심판' 선거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차기 하원 선거를 가정한 정당 선호도 조사(Generic Ballot)에서 민주당이 평균 4.7%p 앞서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55% 수준을 상회하는 등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유권자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더라도, 관세가 즉각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행정부는 관세를 정치적 메시지·대외전략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는 관세 이슈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종합하면, 중간선거는 관세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정책의 정치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증폭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2026년 통상·산업 환경은 대외 통상 리스크와 대내 정치 리스크가 중첩되는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뉴욕·버지니아·뉴저지는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대형 선거 지역이자, 교외·중도층 비중이 높아 중간선거 민심 흐름을 조기에 가늠할 수 있는 지역임

결론적으로, **2026년 통상 · 산업 리스크는 정책 불확실성에 더해 사법 및 정치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관세 정책은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 논리를 벗어나, 전략·정치적 고려에 의해 조정되는 국면으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개별 산업의 관세 노출 수준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 외교 · 안보 이슈와 연계된 복합적 리스크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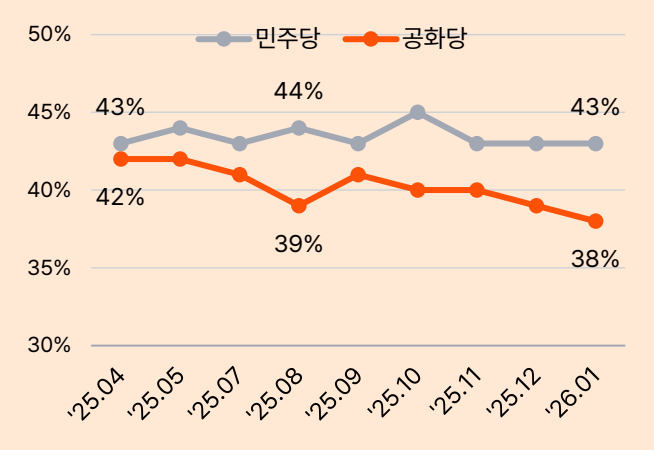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통상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어떠한 전략적 관점으로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6년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관련 주요 현황 및 향후 진행 방향

현재까지 진행 경과	향후 진행 방향
• **現 국회 의석 수 ('26년 1월 기준)** - 상원(100석): 공화당(53석), 민주당(45석), 무소속(2석, 親민주당) - 하원(435석): 공화당(218석), 민주당(213석), 공석(4석) → 상 · 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이나, 근소한 의석 우위에 그침 • **시장 선거 및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25년 11월)** -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등 민주당 · 反트럼프 성향 인물 당선 →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으로 해석되며, '26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진영 부담 증가 • **미국 전역 反트럼프 시위 확산 ('25년 10월~현재)**	• 예비 선거 ('26년 상반기): 정당별 본선 후보 선출 • 본 선거 ('26년 11월 3일): 상원(35석), 하원(435석) 선출 →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4석 확보 필요한 상황

자료: 언론 종합 ('26년 1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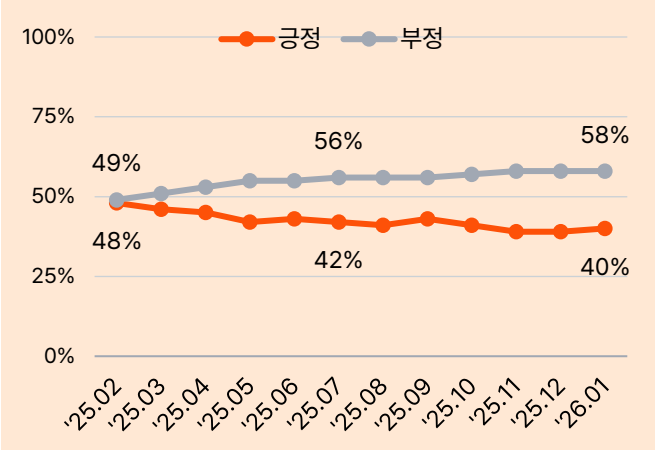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정당 지지율 변화 추이



참고: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향후 중간선거 정당 지지 성향 조사 ('25.04~'26.01)

자료: Economist/YouGov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참고: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CNN · 로이터 등 주요 언론이 실시한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 ('25.02~'26.01)

자료: CNN Politics

4. 기업의 대응 방향과 전략적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간의 통상정책 전개 양상을 종합하면, 향후 글로벌 통상 환경은 관세 정책의 방향성과 적용 조건이 단기간에 안정성을 회복하기보다는, 정책 변화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확실성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세는 이미 단순한 무역 비용 조정 수단을 넘어, 외교·안보·산업 정책과 결합된 전략적 압박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적용 방식 또한 국가· 산업별로 차별적이고 선택적인 형태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관세 정책이 경제 논리보다는 정책적 판단·전략적 목표에 기반해 급격히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기업은 통상 환경 변화를 일시적 이벤트나 단기 리스크로 간주할 수 없으며, 중장기 경영 계획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관세 불확실성이 '상시적 구조' 로 자리잡았다는 전제하에, 기업은 공급·가격·조달·생산 전반을 상시 점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응 방향 1

관세 지속을 전제로 한 경영 계획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세가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사업 포지셔닝을 제약하는 전략 변수로 작동하고 있어, **기업은 '무관세 복귀'를 기본 전제에서 제외하고 중간 이상 관세의 지속을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5년 이후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가 국가·품목별로 탄력적으로 운용되며, 한국에 대해서도 15% 상호관세가 기본 체계로 정착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무적으로는 관세·환율·물류비를 반영한 SKU(재고관리단위)/프로그램 단위의 단위경제성(UE) 재산정과 관세 수준에 연동하는 조건부 가격표 운영이 필요하다. 실제로 자동차·철강·가전 등은 관세 전가 여력과 전가 속도가 품목별로 달라, 분기마다 관세 영향이 이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자동차 산업은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믹스 전환과 차종 믹스(하이브리드 비중 확대) 조정으로 총수출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유지한 바 있다. 이는 관세를 단순 비용이 아니라 제품 포트폴리오와 시장 믹스를 바꾸는 신호로 해석하고 선제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응 방향 2

관세 대응형 '부분 현지화 (Selective Localization)' 전략이 요구된다

전 공정의 미국 이전은 비용·규제 부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지 않으며, 후공정·패키징·모듈 조립 등 **관세·원산지 규정에 민감한 공정 위주로 미국 내 배치를 확대하는 부분 현지화가 합리적**이다.

입지 선정에서는 관세 절감 효과, 자동화 적합도, 인센티브, 인허가 리드타임, IP(지적재산권) 보호, 고객·정부조달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향 제품에 대해서는 Dual BOM(이중 부품 구성)*/공정 경로를 설계해 정책 변동 시 즉각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현대차 · 기아가 미국 조지아 · 앨라배마 생산능력을 확충해 대미 판매를 유지하면서도 수출 물량 의존도를 낮추고, 하이브리드 중심 믹스를 확대해 관세 · 수요 변동을 흡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미국 내 후공정 · 패키징 투자를 확대해 고객 인접성과 예외 조항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이 관찰되고 있다.

*동일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부품 구성과 원산지를 갖는 복수의 자재 명세를 사전에 설계·운용하는 방식으로, 관세·원산지·수출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전략

대응 방향 3

공급망 다변화 초점은 지역 분산이 아니라 '리스크 분리'에 맞춰져야 한다

단순한 지역 분산만으로는 정책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므로, **미국 정책과 직접 연동되는 공급·운영 체인과 비연동 글로벌 체인을 물류·재무·IT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전용 제품군과 글로벌 공용 제품군을 명확히 구분하고, 무역확장법 232·301·IEEPA 관세 체계 및 원산지 · 함량 규칙을 부품 단위의 속성 정보로 시스템에 내재화함으로써, 정책 변화 시 전환 비용과 전환 소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 철강 · 알루미늄 '함량과세' 전환 이후 가전·자동차 부품 등 파생 제품까지 관세 부담이 확산되자, 일부 기업이 미국산 소재 조달 비중을 늘리고 미국향 전용 조립·소재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대응 방향 4

시나리오 기반 의사결정 체계가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

관세 유지·상향·대체수단 전환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전제로, 이를 상시적으로 운용·전환할 수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 트리거(발효, 예외 종료, 소급 적용, 환급)별 영향 분석표를 사전에 마련하고, 가격 및 포트폴리오 조정 레버, 원산지 재설계와 함량 최적화 방안, 환급 가능성 검토 프로세스와 변동가격·하드십(Hardship) 조항[1] 등 법무·세무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할수록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와 실행력이 빨라질 수 있다.

***사례**: 관세 변동이 잦은 산업의 경우, 일부 기업은 관세 유지·상향·예외 인정 시나리오별 손익 영향표를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이에 따라 차종·사양별 생산 물량과 수출 비중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관세 예외 종료 가능성이 감지될 경우, 원산지 전환과 가격 조정이 가능한 물량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신차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1) 계약 체결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불공정해질 경우, 계약 조건의 재협상 또는 조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의미

대응 방향 5

'관세 리스크 대응'과 '산업 협력 기회 활용'의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관세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미국이 육성·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을 선별적으로 드러내는 산업 정책의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세 리스크가 높은 영역을 일률적으로 회피하기보다는, **규제 부담이 큰 사업과 미국 산업전략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업을 구분해 병행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미 안보·산업 전략 정합성과 정치 연동 민감도 두 축으로 사업을 분류해, 정부 조달 파이프라인 확대·현지 CAPEX(미국 내 투자)·JV(합작법인)·노동 훈련 패키지 등 수단을 맞춤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은 관세 부담을 단순 비용이 아닌, 미국 정책 환경 내에서 사업 기회를 재설계하는 전략 변수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례**: 조선업은 미국 조선업 재건 구상과 맞물려 MASGA 협력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한국 조선사가 조선소 현대화·해군 MRO·LNG선 건조 협력 등에서 전략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관세 환경 속에서도 정책 정합성이 높은 분야는 오히려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산업별 실행 포인트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 전반의 전략적 접근 방향을 토대로, 통상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고조되는 환경에서 주요 산업별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는 하이브리드 및 고효율 내연기관(ICE) 모델의 비중을 유지 · 확대하고, 동시에 부품의 원산지 및 함량 규정을 정밀하게 조정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의 모듈 단위 조립 확대와 이중 부품구성(Dual BOM) 운영을 병행할 경우, 신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공급망·원가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 **반도체**: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공정·패키징 기능의 미국 내 이전과 함께, 데이터센터 및 R&D 관련 예외 규정을 잘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사와의 공동 투자(CAPEX) 및 장기공급계약(LTA) 체결 시 관세 변동을 반영하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설비 가동률 및 가격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 **철강·알루미늄/가전**: 철강·알루미늄 및 가전 산업에서는 함량 기준 과세에 대응한 제품·공급망 설계와 소재 대체(스왑)를 통해 관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동시에 미국산 소재 사용 비중 확대와 원가 연동형 가격 조항을 병행함으로써, 관세 부담의 전가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는 공동 구매 및 현지 인증을 연계한 지원 패키지 제공이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미국향 CMO/CDMO 생산 라인 확보와 선행공급(Front-loading) 전략을 병행하는 방식이 정책 전환에 따른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브랜드 의약품,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 제품 유형별로 최혜국(MFN) 적용, 예외 규정, 정부조달 트랙을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조선**: 조선 산업에서는 블록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 현지에서 의장·시험을 수행하는 혼합형 분업 구조를 통해 Jones Act 및 현지 인력 병목 문제를 완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아울러 미 해군 MRO 사업 및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합작법인(JV) 설립과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

나오며: 트럼프 2기 통상 정책 아래서 한국의 선택과 집중

독보적 기술력이 관세 대응의 최종 해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미국이 어떤 산업과 기업을 선택할 것인지 드러내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관세 수준은 경제 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기술력과 산업 주도권을 보유한 국가와 기업이 정책 변화 속에서도 협상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의 확보**다. 핵심 기술과 공정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관세 인상이나 조달·정책 조건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체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국가는 관세 부담을 조정하거나 정책적 예외를 확보할 여지가 커지며, 미국 산업 전략의 파트너로 편입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은 단기적인 비용 대응에 머무르기보다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기술 확보 그 자체를 넘어, 관세와 산업정책 변화 속에서도 선택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반도체, 첨단 제조,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의 기술 경쟁력은 향후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다.

다만 자원이 제한된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산업 전략과의 연계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내 위치, 기술 축적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 분야에 정책과 민간 투자를 집중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관세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산업 경쟁력의 결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은, 단기적인 제도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는 장기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02W-RP-022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Business Contacts

삼일PwC Global Trade Platform

강명수 센터장
myung-soo.kang@pwc.com

플랫폼 리더/ 통상

소주현 Partner
so.juhyun@pwc.com

국제조세총괄

전원엽 Partner
won-yeob.chon@pwc.com

해외진출자문

정민우 Partner
min-woo.jung@pwc.com

무역구제(반덤핑)

한종엽 Partner
jongyup.han@pwc.com

무역구제(반덤핑)

김중현 Partner
joong-hyun.kim@pwc.com

무역구제(반덤핑)

이승욱 Partner
seung-wook.lee@pwc.com

해외세제

박광진 Partner
kwang-jin.park@pwc.com

이전가격

박준환 Partner
jun-hwan.park@pwc.com

해외M&A

허제헌 Partner
je-heon.heo@pwc.com

공급망시스템

최준걸 Partner
jun-kirl.choi@pwc.com

관세

이영모 Partner
youngmo.lee@pwc.com

수출통제

김현준 Director
hyun-jun_1.kim@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원장

jaeyoung.j.choi@pwc.com

삼일PwC경영연구원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고서 시리즈

시리즈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선거 공약의 주요 내용

'트럼프 2.0 시대 도래에 따른 영향 점검('24.11)'

시리즈 2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진행 사항

'트럼프 대통령 취임 50일, 상상 이상이 된 현실('25.03)'

시리즈 3

트럼프 대통령 4/2일 상호관세 발표 주요 내용

'美, 관세전쟁을 선포하다: 궁금증 10문 10답('25. 04)'

시리즈 4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국 무역장벽 주요 내용

'미국이 말하는 '한국' 무역장벽 이해하기('25. 04)'

시리즈 5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의 주요국 및 주요기업의 관세 대응 진행 현황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주요 국가 및 기업의 전략적 대응('25.04)'

시리즈 6

상호관세 90일 유예 이후의 미국 관세 대응 진행 현황과 한국 경제 및 산업 영향 점검

'8/1일로 연장된 미 관세 협상, 한국의 영향과 대응 방안 점검('25.07)'

시리즈 7

'25년 7월 30일 타결된 한국정부의 미국과의 관세 합의 주요 내용 및 산업 영향 점검

'미국과의 관세 합의(7/30) 내용 및 영향('25.08)'